

# 새 집행부 출범

IMF 관리체제와 대량실업 사태를 맞아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삶이 곤경에 처해 있다.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과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현재의 위기를 모면하려 한다. 현재 한국 사회의 계급관계를 볼 때, 노동조합운동전선이 정부와 자본의 '공모'에 맞서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고용불안과 생존권의 파탄을 방어할 가장 강력한 세력임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2기 집행부가 출범했다. 민주노총 조합원은 물론 전세 노동자들과 국민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고, 국내외 독점자본에 맞서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를 방어할 임무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게 민주노총 2기 집행부에 지워져 있다.

노사정위원회 활동과 선거과정에서 불거진 조직 안의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IMF 체제와 대량실업 사태라는 조직 밖의 난제에 대처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민주노총 새 집행부의 향후 과제와 활동 방향을 짚어보고, 새 집행부에 대한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기대와 바램을 들어 보았다.

## I. 민주노총 2기 집행부의 활동 방향과 과제

고영주

## II. 민주노총 새집행부에 바란다

김형주·김범진·박철우



# 민주노총 2기 집행부의 활동 방향과 과제

고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

IMF관리체제와

대량실업사태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상황에서

민주노총 2기 집행부의

활동방향과 과제를 짚어 보았다.

## 1. 민주노총 2기 지도부 출범의 의의

민주노총은 지난 2월 6일 노사정 합의 이후, 대의원 대회 부결, 비대위 구성과 총파업 철회등의 과정을 거치며 약 2개월간 급격한 내부 혼란과 조직적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정리해고제, 근로자과건제의 강행과 입법화, 그리고 민주노총의 조직적 어려움은 사용자들의 일방적인 임금삭감과 체불, 무차별적인 정리해고, 폭력적인 노조탄압을 확산시켰으며 전체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벼랑으로 내몰리게 하였다.

2기 지도부 출범은 작게는 2개월여간의 지도부 공백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조직을 정비하는 출발점이자 노동자·민중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민주노총의 투쟁력 회복에 대한 염원이었다. 그리고 더 나아가 2기 지도부는 경제위기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대안과 노동운동의 자주성, 민주성, 투쟁성, 계급성의 강화를 통해 민주노총의 정체성을 어떻게 대중적으로 회복·강화할 것인가라는 무거운 과제와 책무를 부여받게 되었다. 또한 임기 1년과 위원장 직선제를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된 이갑용·고영주 체제는 짧은 시기에 자주적인 노동운동 노선의 정립과 내부



민주노총의 혁신과 강화를 열망하는 조합원 대중의 광범위한 힘이 2기 집행부의 토대여 추진력이 되어야 한다.

민주주의 강화, 고용안정과 생존권 사수 투쟁 전선의 회복과 전진이라는 무거운 과제를 실현해야 할 임무를 받아안게 되었다.

이런 와중에서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무차별적인 정리해고와 노조탄압 속에 고용 불안과 노조약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조합원들은 IMF와 김대중정권이 퍼부어대는 외환위기 경제위기로 앞에서 일정한 혼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노동자·민중에게만 가혹한 고통과 희생을 전담시키고, 노동조합에 대한 탈법적·폭력적 탄압을 일삼고 있는 자본과 권력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분노가 확산되고 있다. 외환위기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떠넘기고 위기에 치한 자본의 탈출구를 마련하는 것이 IMF와 김대중 정부의 목표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으며, 그 결과 대량으로 쏟아져 나오는 실업자들의 분노는 하늘을 치솟고 있다. 민주

노총의 위기는 노동자·민중 전체의 위기이자 우리 사회 민주주의와 진보진영 전체의 위기로 발전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최후의 보루로서의 민주노총을 사수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대중적 노력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노총의 혁신과 강화를 열망하는 조합원 대중의 광범위한 힘을 신뢰할 때, 비로소 2기 집행부의 소임은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2. 2기 집행부의 헌달 - 조직체계 개편과 5~6월 고용안정 투쟁 준비

2기 집행부는 당선되자마자 4월 1일 오전 명동성당에서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명동성당 농성 돌입과 이후 투쟁 일정을 밝히는 것으로 임기를 시작하였다. 이 자리에서 기자들의 관심은 온통 민주노총이 이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것인가와 실제 총파업을 단행할 것인가에 모아져있

었다. 이 자리에서 이갑용 위원장은 “1기 노사정 위원회는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를 입법화시키고, 민주노총을 상당한 조직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였다… 뒤를 돌아보니 얻은 것은 하나도 없고 실업자와 부당노동행위만 난무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정리해고제 근로자파견제 철폐, 부당노동행위근절, 대등한 협상기구로서의 위상이 전제되지 않으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리고 민주노총은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하면서 민주노조 운동을 무력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자본과 정부의 근본적인 자세 변화가 없는 한, 고용안정과 생존권 확보를 위해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으며 광범위한 전국민적 연대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이후 4월 16일 열린 중앙위원회에서는 5월말~6월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골격으로 하는 98년 상반기 투쟁 방침과 조직체계 개편을 확정하였으며 지도부의 전국순회 간담회를 거친 후, 5월 1일 사무총국 인선을 매듭짓고 3만여명이 참가하는 노동절 대회를 치렀다.

대규모 노동절 대회는 노동자·민중의 분노와 투쟁 결의가 결코 만만치 않음을 확인시켜주었으며, 자본과 권력에게 긴장감과 초조함을 유발시키기에 충분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2기 지도부가 급속하게 조직을 정비하며 투쟁력을 회복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하였다.

평화적인 집회 및 행진의 폭력적인 방해, 집회 참가자 구속 및 지도부 사법처리 업포같은 정부의 강경 대응방침은 민주노총 2기 지도부가 더 이상 전열을 정비하기 전에 내부를 흔들어놓고, 민주노총을 국민 대중으로부터 고립시키는 한편 학생 실업자와의 연대투쟁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교육자책으로 보인다.

어쨌든, 민주노총 2기는 출범 후 한달이라는 짧은 시간에 조직 정비와 투쟁 전선의 회복이라는 조합원 대중의 요구와 당면한 과제를 조합원 대중의 투쟁에 의해 실현시켜나가는 과정에 있으며, 이 성과들을 모아 이후 민주노총의 정체성 확립과 힘있는 3기 집행부 출범이라는 과제를 풀어가야 하는 과제를 부여하고 있다.

### 1) 조직체계 개편

민주노총 조직은 주요하게 임원과 각종 상설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그리고 중앙총국과 산하 지역본부 및 가맹조직인 산별연맹으로 이루어져 있다. 회의체계는 임원과 각 국장으로 이루어지는 상임집행위원회와 임원 및 위원회 위원장, 1만명 이상의 산업별 대표와 일부 지역본부 대표로 이루어지는 중앙집행위원회가 있다.

4월 16일 중앙위원회에서는 일차로 각 위원회 및 국 개편이 이루어졌다. 기존 고용특위와 부당노동행위대책위를 고용안정 및 부당노동행위 대책위로 통합하였으며 공공부문의 일방적인 구조조정 저지와 민

주노총 내 공공부문 조직들의 통합발전을 위하여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공동투쟁 위원회를 신설하였다.

사무총국은 기존 정책기획실(정책국, 기획국), 편집실, 총무국, 교섭국, 대협국, 조직국등 2실 6국 체제에서 쟁의국, 여성국, 문화국, 산업안전국, 고용대책국의 신설, 정책기획실 폐지와 편집실의 편집국으로의 개칭 등을 통해 12국 체제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각 위원회와 사무총국을 1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사업 집행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높일수 있게 되었다.

## 2) 5~6월 투쟁 방침

4월 16일 중앙위원회에서는 5~6월 투쟁의 주요 목표로 1) 전체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생활안정 쟁취 2) 정리해고세, 근로자파견제 철폐와 노동기본권 쟁취 3) 불법임금삭감·체불, 부당노동행위 근절과 현장조직력 복원 4) 일방적인 공공부문 구조조정 저지 5) 실업대책 확보 및 비정규·실업자 조직화 6) 민주노총 확대강화와 산별노조 및 정치세력화 토대 구축 7) IMF 협약 반대와 재벌체제 해체 8) 경제파탄 - 민생파탄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잡았다.

투쟁기조로서는 첫째 민주노총이 중심이 되어 고용불안 해소-고용안정-고용확대 투쟁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자동차 산업 및 공공부문 구조조정 대응 투쟁을 98년 입단투와 연계한 주요 투쟁 동력으로

배치하고 명동성당을 축으로 한 부당노동행위 근절 투쟁, 택시 완전월급제 쟁취 투쟁, 파견제 시행령 저지 투쟁, 건설노동자 투쟁, 기타 노조단합 분쇄 투쟁을 또다른 투쟁동력 확보의 매개로 활용하기로 하였다. 한편 단위노조는 산업별 연맹으로 교섭권을 위임하되 현장동력의 강화에 역점을 두고 연맹과 지역은 투쟁시기의 통일과 중앙으로의 집중투쟁을 통해 전국적 투쟁전선을 구축하기로 결정하였다.

둘째 비정규·미조직·실업 노동자들의 요구를 민주노총 고용인정·확대 투쟁과 연계하고 이들을 적극 조직하여 제2의 투쟁동력을 만들어내며 셋째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IMF협약에 반대하는 노동자·민중연대와 국제연대를 실현할 것을 결의하고 이를 위한 범국민대책위 구성과 국제연대 세미나등 다양한 연대활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5월말 6월 초를 투쟁의 집중 시기로 확정하였으며, 실제로 투쟁을 조직하고 추진할 중앙 투쟁 본부를 꾸리기로 하였다.

## 3) 5~6월 투쟁의 과제와 전망

5~6월 투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노동절 탄압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당면한 현장 투쟁들의 통일과 집중, 정세인식의 통일과 대중적 자신감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요구를 구체화하고 투쟁의 상을 보다 분명하게 해야할 것이다.



5월 1일 노동절에 금속산업연맹 소속 노동자들이 사전 경의대회를 마치고 중앙공원 본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거리행진을 하고 있다.

가. 정세는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다: 투쟁 가능성의 확대

IMF 신탁통치 이후 국가부도 사태에 대한 우려와 IMF에 대한 이해 부족, DJ 정권에 대한 기대, 경제회복을 위해 일정 부분 고용을 감수할 수 있다는 국민 정서와 단위노조의 현장 조직력 약화로 인해 민주노총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불법 임금삭감 및 체불,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단압, 무차별적인 정리 해고와 내용없는 실업대책, 재벌 및 정치권 개혁 부진, 기독교 세력 비호 등으로 인해 노동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으며 DJ에 대한 민심이반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노총 2기 지도부의 출범과 강력한 투쟁 의지 천명, 부당노동행위 지지 및 고용안정 투쟁, 확산되는 실업자의 생존권

요구 등으로 인해 국내외 자본과 권력은 민주노총 조직노동자 투쟁과 실업자들의 분노가 합쳐져 체제 위기로 발전할 가능성에 대해 긴장감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고용·생존권의 위협과 단결의 약화, 노조무력화의 가능성 때문에 일정 부분 위축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오히려 고용과 생존권의 위기로 인해 노동자 내부의 차이(사무직-제조업, 정규직-비정규직같은)가 좁혀지고 있으며, 노조를 통한 단결의 확대 가능성과 투쟁할 수 밖에 없는 조건 또한 커지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경제위기의 본질과 극복대안을 제시하면서, 자본과 권력의 경쟁력 강화 이데올로기에 대응하고 조직력과 투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과 선전홍

보, 투쟁을 배치하면서 조합원들을 묶어내고, 이를 실업자를 포함한 전체 노동자 단결의 강화로 연결시키는 한편 투쟁의 요구와 시기를 집중시킴으로써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 나. 구체적인 요구와 투쟁의 집중

현단계 민주노총의 5월말 6월초 총파업의 배수진을 친 총력투쟁은 단순히 단위노조와 산업별 연맹의 투쟁 시기 집중단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다. 조합원들의 고용안정 요구와 맞아있는 민주노총 중앙 차원의 구체적인 요구를 걸고 강력한 투쟁의 배수진을 칠 때만이 투쟁의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다.

고용안정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요구는 정리해고제·과연제 철폐,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법정 노동시간 40시간, 주요산업 35시간), 노동자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모든 구조조정의 중단과 구조조정시 노조동의, 부당노동행위 근절 및 사용자 처벌, 물가 5% 억제와 임금 5.1~9.2% 인상, 고용세(부유세) 부과를 통한 고용안정기금 20조 확보 등이다.

그리고 실업노동자의 권리보호와 조직화를 위해 모든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과 실업자의 조합원 가입 자격 부여를 걸고 투쟁해야 하며, 재벌해체 및 총수재산의 사회 환수, 노조경영참가 따위를 주요 과제로 설정함으로써 투쟁 동력을 확대시켜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위 요구를 바탕으로 대정부 대자본 직접 형상과 전국적 투쟁전선을 구축하며, 단위노조와 연맹은 고용안정 투쟁과 부당노동행위 근절 투쟁, 사업장별 현안 투쟁, 입단투 등을 힘있게 전개하면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5월 15일~20일 일제히 조정신청을 내고, 5월 20일~27일 쟁위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후, 5월말 6월 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의하였다.

### 3. 1년을 관통하는 2기 집행부의 활동 방향과 과제

향후 민주노총은 메이데이 탄압 대응을 포함한 5~6월 투쟁, 노사정위원회 참가 여부, 민주노총 합법화 문제, 민주노총의 운동노선과 발전전략을 둘러싼 공방 등을 거치면서 안팎으로 투쟁과 성장 과정을 겪을 것이다.

현시기 노사정 위원회는 외자유치와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능할 뿐이며, 노사정간의 대등한 협상이 아니라 민주노총 위원장이 대통령의 자문위원으로서의 종속적 위치로 전락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가할 수 없는 것은 명확하다. 더구나 1기 노사정위원회가 민주노총의 대의원대회 부결과 재협상 요구를 묵살하고 정리해고제와 근로자과연제를 강행 법제화한 반면에 부당노동행위 근절, 실업자 조합원 자격 부여 등 정부의 약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원칙하게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여전히

노사정위원회 참여에 대한 대중적 요구가 있는 것이 사실이며, 정세 변화에 따라 이 요구가 힘을 발휘할 상황이 오는 것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에 대한 무조건적이고 수세적인 불참투쟁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요구를 내걸고 자본과 정부와의 대등한 직접 협상을 공세적으로 요구하면서 직접 협상을 쟁취하거나 노사정위원회의 성격을 바꾸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다 큰 틀에서는 자본과 권력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대항하는 노동운동의 발전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노총의 자주성·민주성·투쟁성·계급성의 강화,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동자 전체의 통일전선 구축과 신자유주의에 맞서는 노동자·민중 연대 및 국제연대전략으로 실현해야 할 것이다.

#### 1) 민주노총의 자주성·민주성·투쟁성·계급성의 강화

자주성은 근본적으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이데올로기의 독립이 있을 때 유지될 수 있다. IMF 체제 하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해야하고, 이를 위해 모든 가치는 희생되어도 좋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 노동자들이 고통과 희생을 감수해야한다.' '감대중정권은 민주적이고 개혁적이니까 일정부분 협력해야한다.' 이같은 인식으로는 자주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노동자는 경제발전을 위해 지난 수십년간 허리띠 졸라매고 일해왔으나, IMF체

제 하에서 이미 엄청난 고통을 전담하고 있다. 노동자가 살아야 경제가 사는 것이다. 기업이 돈을 잘 벌 때는 기업주들이 다 챙기다가, 어려워지니까 노동자를 자르는 손쉬운 방법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 외자유치를 위해 국가기간산업까지 매각하는 것은 저지되어야하며, 외국자본이라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작금의 외자는 그 중심이 투기자본이며 오히려 외환불안과 경제위기를 심화시킬 수 있다. 노동자들의 시위와 파업 때보다도 재벌 및 정치권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외국산업자본의 유치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투쟁할 때 우리가 가진 힘만큼 노동자와 민중의 생존권을 지켜낼 수 있고, 재벌개혁 및 불평등한 IMF 프로그램의 수정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내부의 민주주의가 확실하게 살아있을 때 자주성도 유지·강화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위원 및 대의원수의 확대, 신중하고 대중적인 결정과 결정 사항의 철저한 집행 및 사업의 투명성 확보, 현장 중심의 사업풍토 구축, 위원장 직선제 따위를 추진할 것이며, 필요하면 가칭 '혁신위원회' 또는 '직선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계획이다.

#### 2) 노동자 전체의 통일전선과 노동자 민중 연대 전선 구축

민주노총은 비정규직, 실업노동자, 미조



직 노동자들의 요구와 이해에 결합하고, 그들을 적극 조직화함으로써 정규직-대공장 중심의 노동운동의 틀을 극복하고 전체 노동자 계급의 통일단결을 강화해야하며, 그것이 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한국노총과는 사안별로 연대하되 3중 간선제 폐지등 내부 민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한편, 노사정위나 지자체 선거 대응, 기타 사안에 있어 한국노총이 정부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요구하고 투쟁하면서 장기적으로 자주성과 민주성에 기초한 조직 통합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국민승리21과의 관계 설정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국민승리21의 성과를 사장시켜서도 곤란하지만 동시에 선거 및 의회전출 중심의 정치세력화는 현단계 고용안정 및 민중생존권 사수 투쟁을 약화시키는 고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한다. 민주노총은 투쟁 속에서 조합원의 정치의식을 고양시키는 한편, 국민승리21이 고용문제, 정리해고제 철폐 등을 내걸고 투쟁하면서 민주노조운동을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정치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역할을 대중적으로 확보해야할 것이다.

고용안정과 실업문제 대응, IMF와의 재협상 추진 등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서는 범국민연대투쟁기구가 필요하며, 이는 기존의 노동운동 지원·업호 차원에서 단기적인 캠페인 차원의 대응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조직 중심의 상설공동 투쟁체

로 유지되면서 민중운동 전체의 역량강화로 이어지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3) 노동운동의 국제연대 전략

최근 자본의 신자유주의 공세는 일국의 노동자 대응으로는 극복이 불가능한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 남북 통일운동과 국제연대를 신자유주의와 IMF공세에 대항하는 노동자 연대라는 관점에서 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국제세미나와 전세계 노동네트워크 건설등을 통해 연대와 교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4. 맺으며

민주노총을 둘러싼 정세는 매우 가혹하며, 지난 시기 민주노조 운동이 겪어 보지 못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노동자 관점에서의 올바른 정세인식과 대응, 지도부의 결연한 자세와 조합원대중의 책임있는 참여가 없으면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민주노총 2기 집행부는 조합원 대중이 주인 되어 조합원 대중의 힘에 의해 강화되는 민주노총, 노동자 관점에서 이데올로기적 대안과 투쟁력으로 통일단결하는 힘있는 민주노총, 전체 노동자와 민중의 희망으로 확고하게 자리잡는 민주노총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